

“나도 쫓다 총알 떨어질 때까지 조준사격에 시민 수십명 쓰러져”

**5·18 도청앞 집단발포
공수부대 현장 지휘관의 최초 고백**

**집단발포 직전 실탄 분배했다
무릎꿇·엎드려봐 자세로 사격**

5·18 당시 광주 금남로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 군중을 향한 공수부대의 집단발포가 있기 전 군(軍)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실탄분배가 있었다는 진압군 지휘관의 첫 증언이 나왔다.

〈인터뷰 전문 3면〉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지난 1996년 검찰에서 진술했듯, 실탄 분배는 발포명령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다. 대대본부 측에서 공수부대 곳곳을 돌며 군 간부들에게 실탄을 분배했다는 점에서 상부 명령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위로 파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청 앞 집단발포에 대해 “군의 자위권 행사로, 우발적 발포”라는 그동안의 군 입장에도 배치되는 증언이어서 진상규명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5·18 당시 특전사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지대장(장교 1명·부사관 등 12명으로 11·13여단만 편제)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윤성식(가명·60·당시 중위)씨는 지난 6일 광주일보와 만나 1980년 5월 27일 새벽 기습적으로 진행된 도청진압작전(상무총정작전)의 경우 “작전 명령에 따른 명백한 학살행위”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역시 시위에 나선 무고한 시민을 향해 군이 총탄을 쏘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심경도 밝혔다.

윤 씨는 이날 2시간여에 걸쳐 국내 한 섬에서 진행된 광주 일보와 인터뷰에서 “80년 5월 21일 낮 공수부대의 첫 발포는 시위대 버스가 금남로에서 우리가 있던 도청 방면으로 달려 들 당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는 ‘무릎 꿇, 엎드려 봐’ 자세로 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바퀴 등을 조준사격했다. 당시 시민들은 총을 먼저 쏘지도, 총을 들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는 물론 지금도 그 일을 무척 후회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집단 발포가 있기 전 대대본부 행정병 2~3명이 돌아다니며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들에게 실탄을 분배했다. 우리 63대대에 간부가 100여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분배된 실탄은 2000발 안팎이었을 것”이라며 “실탄 분배의 형식과 의미에 미뤄 이는 상부의 명령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 (지휘부에서)도청 철수명령을 내려주길 바랐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철수명령이 내려졌으면 발포도, 시민 희생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휘부를 일망했다.

윤씨는 5·18민중항쟁 당시 사태 악화 배경의 하나로 월남전



집단발포 1시간 전 1980년 5월 21일 12시께 광주 시민들과 공수부대가 도청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 시민들은 불과 한 시간 후 집단 발포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하사관(부사관)들 중 일부를 지목했다. 그는 “시민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머리를 진압봉으로 강타하는 등 악랄한 진압을 펼친 군인들 일부가 월남전에 다녀왔던 하사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당시 일부 하사관들의 경우 인명살상 경험이 있는데다 나이나 전투력이 월등해 솔직히 통제가 안 됐다.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았고 사실이 그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자신의 부대가 광주에 투입됐던 5월 19일 광주는 평화로웠다고 기억했다. 그는 “시위에 나선 광주 시민들은 폭도가 아니라 진짜 시민이었다. 북한군이 당시 광주에서 활동했다고 전두환이 주장했는데, 말도 안되는 일이다. 그건 전두환의 망상”이라고 단언했다.

윤씨는 “당시 광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전두환과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이 정권 전환을 위해 매우 조종한 일이라고 생각이 다 알지 않나?”라면서 “전두환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도구로 쓰여 살상을 저지른 우리 공수부대원들이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5·18묘지 사상 최대 추모 인파

전국에서 하루 10만명 넘어... 17일 금남로서 전야제 행사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앞두고 광주 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을 기리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광주를 비롯한 서울·경기·부산·대구·충청·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추모객은 주말인 지난 13일 하루에만 10만 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모 인파로, 지난 2015년 5월 한 달간 28만 명 그리고 2016년 5월 30만 명에 이어 올해 5월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이미 23만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추모객은 민주주의의 문을 지나 민주광장을 통해 참배단 앞에서 참배를 한 후 영령들이 잠든 개인 묘역으로 이동해 송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인천에서 온 이동주(47)씨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으니 희미하지만 37년 전 5월 그날이 떠오른다”며 “새 시대를 맞아 또다시 떠오르는 민주주의는 영령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김선희(47)씨는 “매년 5월 추모기간에는 방문객이 항상 많지만 올해 5월은 역대

최대로 방문객이 많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5·18 민중항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제37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 2017 범국민대회와 제37주년 5·18 민중항쟁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17일에는 제37주년 5·18 민중항쟁 전야 행사가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이며 18일에는 5·18 민중항쟁 제37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등 5월 행사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기자 eej621@kwangju.co.kr

문대통령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도

세월호 조사 등 개혁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관련기사 2·6면>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더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지시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에서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기념식에서 이 노래 제창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획일적인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역사 교육이 더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 대

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에서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무효화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5·18 조국 민정수석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 정호용 문건 파동 사건 등에 대해 수사상 미진한 부분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 반부패비서관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박형철(49·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박 비서관은 검사 재직 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좌천성인사로 수사직에서 배제됐으며 결국 2016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해 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통합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무 전병헌·사회혁신 이승창·사회수석 김수현

청와대 비서실 인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병헌(59)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사회혁신수석에는 이승창(56)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사회수석에는 김수현(55) 전 환경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프로필 4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서실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서 제가 할 역할을 한마디로 하면 창의 정부”라면서 “청와대가 국민뿐 아니라 국회와의 소통에도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촛불현장에서 보셨듯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는 흐름이

일변화됐는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여러 자원·제도·법령 등을 고치고 만들어 그런 일을 시민이 잘 하게 돕는 일이 사회혁신수석의 임무이자 도리”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저는 경제수석, 일자리수석과 함께 국민·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조율하는 데 헌신의 힘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세 명의 신임 수석 비서관을 임명함에 따라 ‘8수석’ 체제의 새 정부 대통령 비서실은 신설된 정책실장과 산하 일자리수석 및 경제수석 인선만 남겨 놓게 됐다. 안보실장과 산하 1·2차장도 조만간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2017년도 광주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설명회

CG활용 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

일시 2017. 5. 16 (화) 15:00 장소 광주CGI센터 3층 대회의실

자세한 사항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gitc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